

공정한 거래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유통구조 개선 시급



정부가 추진하는 ‘계란위생관리 대책’에 대해 정부, 농가, 유통, 소비자가 한곳에 모여 의견교환을 하고자 지난 6월 7일 축산신문 주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 내용을 정리·요약해 본지를 통해 전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참석자

- 최대휴 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 신록주 기획실장 (한국소비자연맹)
- 김삼수 팀장 (농협중앙회 축산지원과 양계팀)
- 안영기 위원장 ((사)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
- 김인배 지부장 ((사)대한양계협회 경기도 포천채란지부)
- 강종성 회장 ((사)한국계란유통협회)
- 배영수 위원장 ((사)한국계란유통협회 총무위원회)

일 시 : 2010년 6월 7일

장 소 : 축산신문 4층 회의실

사회자 : 장지현 편집국장(축산신문사)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까. 이는 계란 생산 농가는 물론 유통업체와 소비자 모두의 한결 같은 과제다. 그러나 그동안 업계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계란 유통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때문에 정부는 최근 계란 위생관리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우선 식용란유통판매업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정부의 이 같은 계란 위생 관리 대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 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점검해 봤다.

사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란 위생 안전 관리 대책의 배경과 추진 상 문제점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휴
과장

계란은 완전식품으로서 신선하고 위생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소시모 등은 식용란의 보존 유통기준, 표시 등 구체적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고 더욱이 최근에는 부화실패란 불법 유통이 적발되는 등 위생관리 대책 강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계란제품위생관리 종합대책 대책을 수립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지난 5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과 더불어 식용란유통판매업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식용란유통업 신설에 따른 시설 기준, 포장 의무화, 표시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삼수
팀장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정부의 대책이 양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축산물중 소와 돼지의 경우 축산물 공판장을 통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은 공정한 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란 유통의 86%가 민간 상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장유통체계 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유통 환경 속에서 생산 농가들은 생산비 증가 부담과 싸워야 하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안영기
위원장

채란인들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품질, 최상 품질의 계란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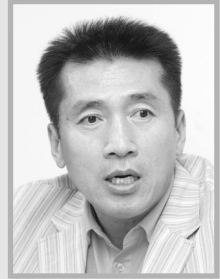
가격대비 높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상투적인 유통 시스템 때문에 일부소비자들은 질이 떨어지는 계란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계란 위생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생산자들도 공감합니다. 문제는 새로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채란농가가 과연 얼마나 될 것 이냐는 것입니다. 채란농가는 현재 1,650농가 정도 됩니다. 그 농가들 중 종합 대책을 수용할 수 있는 농가는 20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50여 농가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김인배
지부장**

생산자들의 입장에서는 생산된 계란이 신선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 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신선란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냉장 저장란이 일반 실온 상태에서 유통됨으로써 소비자들은 불량계란을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장 계란은 가공용으로만 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신선한 계란을 먹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지켜져야 합니다.



**신록주
기획실장**

소비자 입장에서 계란의 신선도 여부는 결국 온도와 유통기한 등을 통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계란 위생대책이 기대됩니다.

계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소비자들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산란일자가 표시돼 있다던가, 등급일자가 표시돼 있는 계란을 선호합니다.

물론 등급 표시된 계란이라고 100%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등급란도 막상 깨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의 계란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계란이 신선하고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 빨리 갖춰졌으면 합니다.



**최대휴
과장**

식품 안전관리의 기본은 먹고 탈이 안 나게 하는 것입니다.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통 문제와 함께 계란의 살모넬라 관리를 포함한 것입니다.

식품안전은 99.9%가 아니라 100%를 지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계란을 소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또 관련 업계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생산 유통 소비자들 모두가 이해관계자입니다. 따라서 서로간의 협력이 필요 합니다.



**강종성
회장**

계란의 특수성상 생산과 유통이 함께 가야합니다. 현재 10%도 안 되는 특수 계층에만 신선란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브랜드란도 좋지만 문제는 생산한 계란이 골고루 팔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우리 채란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저장 창고에서 1달 이상 된 계란이 일반 소비자에게 신선란인 양 팔리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삼수
과장**

실효성 있고 현실성이 있는 계란위생안전대책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냉장 보관한 계란이 실온에서 유통되고, 그것이 다시 냉장고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온탕 냉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선도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닭의 연령 표기도 필요합니다. 25주령과 80주령이 닭이 생산하는 계란의 품질은 분명히 다릅니다. 일본의 시스템도 배워야 합니다. 일본은 생산과 유통을 직거래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영기
위원장**

표시의무자는 계란을 유통하는 자로, 농가로부터 수집하는 즉시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란 1톤은 차에 많이 실으면 1천판(3만개)정도 실리고, 대규모 도매를 하는 사람은 5톤(13만개)을 싣습니다. 그런데 유통 종사자가 13만개를 일일이 내려 마킹을 하고 다시 유통 한다면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때문에 농가에게 마킹이 전가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달라는 것입니다. 계란도 축산물이지만 다른 축산물과 다르게 농가에서 소비자로 디렉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300만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이런 점이 간과된 채 법이 집행된다면 내년 1월부터 많은 농가가 불법자가 될 것으로 우려 됩니다.



**김인배
지부장**

위생적인 대책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수용을 못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흡수해가면서 생산일자를 표시하든지 해야 합니다. 생산일자를 표기해서 소비자에게 신선란이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농가는 지금도 사료값이 올라 생산비도 못 건지는 어려운 판국에 이 제도 시행으로 농가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배영수
위원장**

할인매장의 예를 들면 대형유통매장은 2년 전부터 추적이 가능하게끔 마킹을 하고 포장일자를 표시하고, 농장명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산란일자와 등급이 표시된 계란을 유통 시키면 소비자들은 그 계란을 소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란을 유통하는 유통인들에게 매출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10명중에 8명의 소비자는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 차근차근 제도를 바꿔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등급란부터 먼저 정확한 산란일을 표기해서 유통시키고 이곳의 장 단점을 찾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강종성
회장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안전관리시스템 확보와 유통구조개선 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란 공판장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유통인들이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생산자들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통입니다. 우리는 6~10월까지 덤핑만 전문적으로 하는 “계란이 왔어요” 하는 상인들을 자주 봅니다. 이런 유통으로는 산란계 산업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신록주
기획실장

시행 일정부터 걱정스러운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년 1월이면 소비가 많은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먼저 시작해 본다든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춰 놓고 시작을 한다는 것은 안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이것이 가야하는 방향이라고 판단하기에 우선 시행에 들어간 다음 시행착오가 있으면 바로 잡아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이제 첫 걸음을 띄웠으니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똑같은 계란이 유통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휴
과장

양계농가 입장에서 계란위생안전대책 중 채란일자 표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채란일자 표기가 어렵다고 하면 유통일자 표기만 하고 채란일자는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든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생산농가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지원 방법을 찾아 내년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이 자리에서 나온 계란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유통을 위한 의견은 정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우리나라 채란양계산업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노금호 축산신문 기자)